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1면	"2024강원대회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마중물"	1
강원도민일보	02면	"올림픽 매개로 3개국 청소년 다각적 교류 모색해야"	1
江原日報	온라인	원주지역 어린이집 원장들 화합 다져	2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예결소위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 예산안 심의	3
江原日報	03면	고강도 긴축 새해 예산안 '밤샘 진통'	4
江原日報	온라인	도의회 예결위 18시간 진통 끝에 농업 예산 증액 등 예산안...	5
江原日報	20면	"동해항 고부가 기업 유치 준비해야"	6
강원도민일보	21면	"강원 애국선열 희생 기억하며 보훈문화 확산"	7
연합뉴스		강원 고성군, 2023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8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 디자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강원디자인포럼 열...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0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기영(왼쪽) 시의장·박호균(강릉) 도의회 사회문화...	10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1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11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11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신영재(왼쪽) 홍천군수·홍성기(홍천) 도의원	11
江原日報	01면	폐광 예고 태백·삼척 '위기지역' 지정 사활	12
江原日報	02면	폐광 예고 태백·삼척 '위기지역' 지정 사활	12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남부시장 '점포 50개 채우기' 고심	13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부론산단 800억원 규모 PF 조달 성사	13
강원도민일보	11면	지역민 53% "강릉수력발전소 재가동 찬성"	14
강원도민일보	13면	동해시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탄력	14
江原日報	04면	'강릉 24.3도' 11월 기온 역대 최고치 기록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공금 제멋대로 공직 도덕성 점검을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동계청소년올림픽 봉사자에 응원을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동해·삼척 수소산업, 민자 유치 차질 없어야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올해 도내 체불 임금 35% 증가, 엄중한 처벌을	19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01면

"2024강원대회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마중물"

GANGWON 2024 강원도민과 함께 붐업
한중일 스포츠-미디어 포럼

동북아 3국 교류협력 확대 공감
세번의 올림픽 잇단 개최 바탕
2024대회 성공개최 방안 모색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및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3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 포럼'이 7일 오후 강릉 씨마크호텔 바다홀에서 열렸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캠페인 : 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에서 참석자들이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

아시아권에서 첫 개최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확산 및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한·중·일 스포츠·미디어 협력이 새로운 형태로 추진되는 것과 맞물려 동북아 3개국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스포츠 교류의 장(場)이 열릴 전망이다. 또, 동북아 3개국 미디어는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매개로 문화·관광 교류 등 각 부문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이 후원한 '2023 제3회 한중일 스포츠-미디어 포럼'이 7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포럼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4강원대회 붐업을 위해 한·중·일 3개국 스포츠·미디어(강원도민일보·인민일보·아사히신문 특파원) 관계자들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 2018평창기념재단, 도의회, 도와 각 시군, 강릉고 야구부, 각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종오 2024강원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이 될 2024강원대회가 청소년들의 개인 기량 성장을 넘어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공존과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대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한중일 스포츠-미디어 포럼을 통해 2024강원대회 붐업과 성공개최, 3개국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스포츠 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리오카 유사쿠 일본스포츠협회 전무이사는 한중일 스포츠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 3개국은 올림픽을 성공개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평화와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동북아 3개국 미디어 관계자들 역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동북아 3국 간 다양한 교류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18평창-2020도쿄-2022베이징으로 이어진 세 번의 올림픽을 통해 동북아의 높아진 위상을 세계에 알린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강원 2024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깊이있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은 "동북아 3개국이 릴레이로 올림픽을 개최했다. 2024대회는 그 릴레이를 이어가는 것으로 반드시 성공개최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옌량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차장은 "한중일 3국의 우정이 2024강원대회 슬로건인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선 2024강원대회 붐업 및 동북아 3국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됐다. 박지은·이설화 ▶관련기사 2면·상보 11일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02면

"올림픽 매개로 3개국 청소년 다각적 교류 모색해야"

GANGWON 2024 강원도민과 함께 붐업
한중일 스포츠-미디어 포럼

스포츠 등 전 분야 확장 강조
행사 의미·미래 유산화 논의
2024강원대회 성공 개최 다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및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3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 포럼'이 7일 오후 강릉 씨마크호텔 바다홀에서 열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영

7일 강릉에서 열린 '2023한중일 스포츠-미디어 포럼'에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매개로 3개국 청소년 교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연이어 제기됐다. 동계종목 뿐만 아니라 야구 등 각 스포츠 부문 청소년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다.

진종오 2024강원대회조직위 공동위원장은 "한중일 3국에 있어, 이번 올림픽은 네번째다. 청소년들이 개인 기량 성장을 넘어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공존과 화합의 의미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모리오카 유사쿠 일본스포츠협회 전무이사는 지난 30여년 간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역사를 짚었다. 그는 "대회에 참가했던 일본 선수들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스포츠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경기 전 한국에 대한 긍정인식이 64% 정도되던 것이 경기 이후 86%로 올라가는 등 친근감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우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본부장은 "기존 30여년 간 교류를 더 심도있게, 확고하게, 확장성 있게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까지도 교류가 확장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청소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오섭 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위원장은 "강릉고 야구부는 어느 지역보다 실력과 후원이 탄탄하다"며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전지훈련 등의 교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소년 교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강릉고 1학년 야구부 한 학생은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개막식에 초대해달라"며 2024대회의 청소년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스포츠는 국경이 없다. 한중일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경험을 공유해 2024강원대회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고,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은 "함께 노력해 더 빛날 수 있는 올림픽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관계로 영상을 통해 발제에 나선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2024강원대회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2024강원대회를 통한 청소년 스포츠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이설화·이정호

江原日報
2023년 12월 07일 (목)
사회

원주지역 어린이집 원장들 화합 다져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 12월 7일 열려

원주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 연찬회가 7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렸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이번 행사는 강연, 기념식 및 시상식, 음악회,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자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이재용 원주시의장 등 도.시의원,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등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원주지역 보육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박미하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다 같이 행복한 보육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다"며 "직면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항상 당당하고 묵묵하게 현장을 지키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박미하) 원장 연찬회가 7일 빌라드아모르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이재용 원주시의장 등 도.시의원,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등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03면

자치도의회 예결소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예결위원장실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 강원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논의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 예산안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 제4차 회의가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03면

고강도 긴축 새해 예산안 '밤샘 진통'

자치도·도의회 팽팽한 줄다리기 … 예결소위 결론 못내
"마른 수건 짠다는 말 실감 … 예산 균형집행 위해 최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고강도 긴축재정 방침을 밝히고 예산을 짠 가운데 도의회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농업을 비롯한 민생 예산을 살리기 위해 고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제324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강원자치도가 제출한 7조5,86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이날 밤 늦게까지 결론내지 못했다.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기준 총 21개 사업에 대해 16억4,99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이보다 많은 48개 사업 52억5,520만원을 증액했다. 또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도농업기술원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됐다며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거부하면서 강원자치도가 제출한 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제출됐다.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예산 5,304억원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예결위원들이 증액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졌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 여파로 전체 예산이 빡빡하게 짜이면서 위원들은 감액할 사업을 찾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보통 예결위원들이 삭감을 하기 위해 애쓰는데, 지금은 이렇게 깎아서 내년에 사업이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많다"며 "마른 수건을 짠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증액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소위원회와 도청 집행부 간 예산안 조정이 마무리되는 즉시 본예산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현정기자 together@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도의회 예결위 18시간 진통 끝에 농업 예산 증액 등 예산안 조정

8일 새벽 내년도 편성안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7~8일 예결위원장실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 강원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논의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 농업 예산을 인상하는 등 진통 끝에 강원자치도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강원자치도가 제출한 7조5,86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어 18시간 가량 지나 8일 새벽 4시40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조정액 규모는 47억 6,652만원이다.

과다 삭감돼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거부로 이어졌던 농업기술원 예산을 비롯해 전체 농업 예산은 24개 사업에 19억1,442만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2억40만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1억4,960만원 옥수수 종자생산 1억2,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반도체 산업기반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 등 김진태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은 그대로 세워지게 됐다.

다만 강원연구원 운영지원 3억원 농촌관광사업 경쟁력 강화 2억8,000만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1억500만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1억원 AI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재구조화 사업 1억원 등은 삭감됐다. 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설계.감리 용역, 신청사 기반시설 보상비 등을 감액하고 이를 기금 내 예치금으로 전환해 증액 편성하는 내용의 집행부 제안사항을 수용했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여건 속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지역 경제 활력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예산 편성에 고민 많았지만,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다”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강원자치도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도교육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를 시작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지역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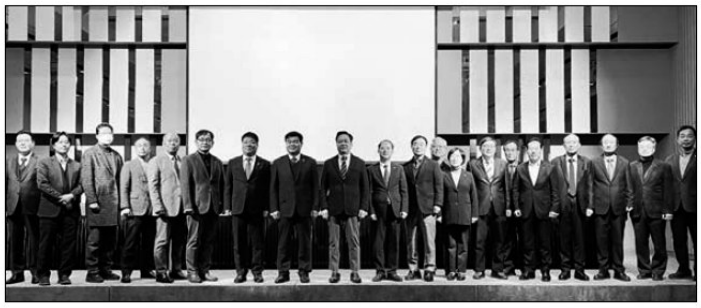
“동해항 고부가 기업 유치 준비해야”

시·북방물류진흥원·본보 자유무역지역 발전포럼
정부 계획 시너지 … 심규언 시장 “신성장동력 육성”

【동해】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고부가가치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열린 ‘2023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발전포럼’에서 최나영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은 “총 물동량은 부산항이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 비중은 인천항이 35%로 가장 높고 기업당 매출액은 울산항이 724억원으로 가장 높다”며 “이는 제조업이나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화물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동해항 항만형자유무역지역은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국토교통부의 물류 혁신특구 지정 등 정부의 계획과 연계해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발전 포럼이 7일 동해 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나영환 센터장, 김종길 성결대 외래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충재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 박종을 동해시 미래전략담당관,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채수복 강원대 교수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동해시와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최재석·김기하·유순옥 도의원,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억찬 (사)강원경제인연합회장, 김규태 동해상공회의소회장, 이성재 북평산단경영자협의회장 등 내빈과 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규언 시장은 “항만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동해지역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포럼을 통해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핵심 가치를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호 시의장은 “동해항이 신항 개발과 연계해 복합물류항만기능을 구축하고 동해 본항은 고부가가치의 항만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글로벌물류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이러한 동해항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인물 21면

'제28회 강원도 항일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및 위패 봉안식'이 7일 오전 춘천 신북읍 천전리 강원도항일애국선열추모탑에서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주관으로 열렸다.

"강원 애국선열 희생 기억하며 보훈문화 확산"

춘천서 합동추모제·위패 봉안식

'제28회 강원도 항일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및 위패 봉안식'이 7일 오전 춘천 신북읍 천전리 강원도항일애국선열추모탑에서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중 광복회 강원도지부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이정희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김찬규 강원동부보훈지청장 등 관계자들과 광복회원 및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패 봉안식, 제향과 헌화, 분향, 유공자표창, 개식사 및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위패 봉안식에서 최근 서훈된 6명의 위패를 추가해 총 640명의 위패가 강원도 독립운동 영웅관에 봉안됐다.

유공자표창에서 독립운동선양사업에 앞장선 이성호 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주무관, 변유경 강원서부보훈지청 주무관, 최유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관, 김윤희 춘천시 복지지원과 주무관에게 광복회장 표창이 전달됐다.

최근중 도지부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여섯 분만 추가 위패봉안한 것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모든 분들의 위패가 봉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이 추모제를 계기로 나라를 지켜내신 애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재혁

연합뉴스

2023년 12월 07일 (목)
사회

강원 고성군, 2023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강원 고성=연합뉴스) 7일 강원 고성군 고성문화의집에서 열린 2023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함명준 군수와 김일용 군의회 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이덕하 강원자원봉사센터장,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2.7 [강원 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江原日報
2023년 12월 07일 (목)
정치

‘강원 디자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강원 디자인포럼 열려

(재)강원디자인진흥원과 (사)강원디자인학회, (사)강원디자인산업협회는 7일 진흥원 디자인홀에서 ‘특별자치도 시대, 강원 디자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2023 강원디자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남진우 산업국장, 강원지역 유관기관,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및 지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디자인기업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봄컴퍼니’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참가한 ‘디플인사이트’에 진흥원장상이 수여됐다. 또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했다.

‘이음파트너스’ 안장원 대표의 기조강연과 사업 우수사례, 디자인단체별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2023년 12월 07일 (목)
종합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8일 오후 6시 춘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 3층에서 열리는 2023 북한이탈주민과 하나되는 송년의 밤에 참석.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10일 오후 5시 고성군 죽왕면 오션투유리조트 연회장에서 열리는 고성자율방범연합대 방범인의 날 및 고성군자율방범 연합대 8대.9대 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강릉 남항진 세인트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3 강릉시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인제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설악권 임업관계자 간담회에 참석.

유순옥(비례) 도의원은 8일 오후 6시 뉴동해관광호텔 별관에서 열리는 2023 동해시지회 송년의 밤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8일 오후 3시 속초시봉사관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 창립 1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8일 오전 10시 남항진 세인트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3 강릉시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8일 오후 4시 홍천 K컨벤션웨딩홀 3층에서 열리는 2023 홍천군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인물동정 11면

김기영(왼쪽)시의장·박호균(강릉)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은8일 오전10시강릉 세인트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강릉시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및평가대회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인물동정 17면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8일 오후 3시 속초시봉사관에서열리는대한적십자 창립 118주년 기념행사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인물동정 17면

취임식에참석한다.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10일오후5시 고성군 오션투유리조트에서열리는 고성군자율방범연합대 8대·9대 대장 이·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인물동정 09면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인물동정 14면

엄 윤 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인제 남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통합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인물동정 14면

신영재(왼쪽) 홍천군수·홍성기(홍천) 도의원은 8일 오후 4시 K컨벤션웨딩홀 3층에서 열리는 2023 홍천군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01면

폐광 예고 태백·삼척 '위기지역' 지정 사활

道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신청
연 최대 300억 국비 지원 기대
실사 등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
'산업위기지역' 선정에도 심혈

속보=2024년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용위기지역' 지정(본보 10월16일자 1면 보도)을 신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지난 6일 태백고용노동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와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사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고시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여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지정절차 최소화를 위해 연내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폐광지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될 전망이다. 고용위기지역은 2년간 유지되며,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018년 조선업 장기 침체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과 GM공장,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전북 군산, 창원 진해구가 지정된 바 있다. 현재는 거제시 1곳만 유지하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 규모는 5조6,000억원,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종합 02면

폐광지 고용위기지역 신청

-1면에서 계속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자치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 위기 시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산자부가 지정한다. 대체산업 육성, SOC(철도·도로 등) 구축, 금융 지원 등 1조5,0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진헌 강원자치도 자원산업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은 이후 폐광지역 시·군과 힘을 합쳐 SOC 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유치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지역 09면

춘천 남부시장 '점포 50개 채우기' 고심

현재 39개 전통시장 요건 미흡
내년 2월까지 지정 취소 유예
시장 "상인 증가세 대책 총력"

지난해 전통시장 지정 취소를 1년 유예한 춘천남부종합시장이 두달 안에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춘천시는 일단 내년도 남부시장 지원 예산을 세워놨지만, 유예기간 연장을 비롯한 실질적 방침은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시장은 지난해 전통시장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취소 결정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점포 수 50개 이상, 건축물 점유 토지면적 100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소상공인 저리 융자를 비롯해 관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부시장의 경우 24시간 근무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당장 내년 2월에 끝나는 남부시장은 아직도 점포 수가 39개로 인정 기준을 밑돌고 있다. 1982년 6월에 완공된 춘천남부종합시장은 지난 40년간 자리를 지켜왔지만 상권 이동, 유동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좀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태다.

남부시장측은 상인들이 느는 추세인 만큼 연말까지 점포가 40개 중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시장조합 관계자는 "입주자가 늘면서 공실이 점차 줄어 연말까지 40개 점포 중반까진 가능하다"며 "20~30개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서도 지원 책 마련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일단 내년도 남부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1800만원, 지킴이 사업 인건비 9700만원(도, 시 총합), 화재보험·공재에 42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남부시장의 점포 수가 줄었다고 전통시장 지원을 빼면 더 열악한 상태가 된다. 점포 수 확보와 유예기간을 신경써 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전통시장 요건이 안 된다고 해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현경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지역 10면

원주 부론산단 800억원 규모 PF 조달 성사

<프로젝트 금융>

IBK투자증권 등 금융사 5곳
PF 약정 체결 조성 동력 확보
부론IC 설치 추진 업무협약도

무려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었다. 원주시가 출자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부론산단 조성사업의 핵심 추진 동력인 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PF) 약정이 7일 체결됐다. PF에는 금융주선기관인 IBK투자증권을 비롯, 금융사 5곳이 참여했다.

부론산단 조성은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지정 후 주관 시공사 변경,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15년 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시공사로 참여, 금융시장 경색 및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 PF 조달에 성공하면서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추진을 본격화하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지역 건설사 3곳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하(원주갑)·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함진규 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가칭)부론IC 설치·운영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부론산단 조성은 물론 향후 운영 성공을 위한 핵심 축인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개설도 추진이 공식화됐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하(원주갑)·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함진규 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부론IC 설치·운영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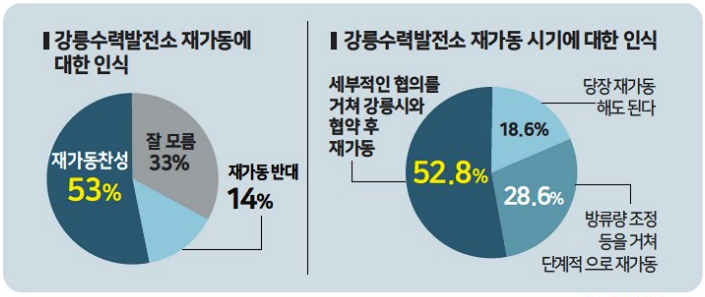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와 공사의 업무 분담 및 비용 부담, 사업 기간 등이 담긴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는 오는 2027년 개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결허가를 받은 지 7년 여 만으로, 총 사업비는 44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부론IC가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산업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부론산단 등 지역 내 공장·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원강수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여건 마련으로 우량기업을 속속 유치해 서·남부권 발전,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는 "민선8기 원주시의 굳은 의지에 힘입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무재해, 적기준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지역 11면

지역민 53% "강릉수력발전소 재가동 찬성"

강원사회연구소 여론조사
500명 직접대면, 반대 14%
78% "도암댐 활용 남대천 개선"



자료/강원사회연구소

22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강릉수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남대천 수량확보를 위해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긍정적인 의견이 반대의견에 비해 3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수력발전 재개에 대한 시민 의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강원도민일보사 강원사회연구소는 최근 강릉수력발전재개에 대한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재가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53%, 반대 의견이 14%로 긍정적인 답변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로 강릉수력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강릉수력발전소의 정상화와 관련, 시와 시의회, 각 기관장, 시민·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지역 오피니언리더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직접대면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강릉수력발전소 정상화 이슈에 대한 인지도는 88.8%, 재가동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53%, 반대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대천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78.4%로 반대 6.2%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남대천이 도시하천으로 휴식공간과 환경개선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4%로 생태서식지 역할 20.6%보다 높게 나왔다. 발전소에 대한 재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재가동 해야 한다 52.8%, 방류량 조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28.6%, 당장 재가동해도 된다 18.6%로 나타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근 도암댐 수질과 생태계 환경개선이 과거보다 좋아져 강릉수력 발전재개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 같다"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 재개 공론화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지역 13면

동해시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탄력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확정
3177억원 투입 2024년 착수
심 시장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3000억원 이상이 투자돼 동해 추암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삼척 호산 LNG인수기지까지 반경 20㎞ 구역을 수소 저장·운송 집적단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정되면서 청정에너지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바이오·반도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3대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되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1년 8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된 후 기재부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약 2년만에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

이에따라 국비 439억원, 지방비 423억원, 민자 2315억원 등 총사업비 3177억원이 투입, 동해·삼척시 등 영동권을 기반으로 한 강원도 수소산업이 본격 추진돼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수소 저장·운송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먼저 동해시에는 GS동해전력이 조성한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33만 3663㎡) 중 31만4536㎡의 부지에 65개의 수소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1만4456㎡에 산업진흥센터·안전성 시험센터가, 4671㎡에 실증테스트 베드가 건립되는 등 수소 저장·운송 집적 공간이 조성된다.

삼척시에는 호산항 LNG 생산기지에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해 강원권·수도권·중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 수소경제 공급 기반이 완성된다.

동해시는 향후 도와 삼척시·강원테크노파크 등과 사업 추진방향을 협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24년 예산확보 후 사업착수에 돌입할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 예타 통과로 동해항 배후지인 북평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 수소항만·수전해·기회발전특구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해양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사회 0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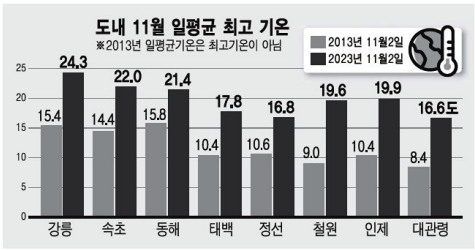
'강릉 24.3도' 11월 기온 역대 최고치 기록

엘니뇨 영향 동해 등 8개 시·군 11월 최고 일평균 기온 경신
바다도 '펄펄'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 평균보다 2도 상승

엘니뇨의 영향으로 12월 들어서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이 역대 세 번째로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자치도 내에서는 대관령과 강릉을 비롯해 8개 시·군 관측지점에서 11월 최고 일평균기온을 넘어섰다. 이는 기상청이 올 9월부터 11월까지 기후를 관측, 분석한 결과다. 올겨울에도 엘니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11월 지점별 일극값 경신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11월 일평균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한 지역은 강릉(북강릉,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정선, 철원, 인제, 대관령 등 9개 지점, 8개 시·군에 이른다. 강릉의 경우 11월 최고 일평균기온이 24.3도로 역대 최고기온을 보였다. 종전까지는 1979년 20.9도였다. 겨울 풍경의 대표격인 대관령 역시 올 11월2일 16.6도를 기록, 1971년 관측 이래 일평균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동해도 11월2일 21.4도를 기록해 1992년 관측 개시 이후 처음으로 11월 일평균기온이 20도를 넘었다. 인제에서도 같은 날 19.9도의 기온이 관측되는 등 이상고온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고, 태백에서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11월 일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서는 등 기온 상승세가 뚜렷했다.

해수면온도 변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동해 해수면온도는 25.8도로 측정돼 최근 10년 평균 해수면온도 23.8도보다 2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면온도는 0.2도만 상승해도 해양 생태계 파괴와 폭우, 폭설 증가 등 다양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상청은 올겨울에도 엘니뇨 등 기후변화와 밀접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늦가을에는 기온변동이 매우 커 기후변화를 실감한 가을철"이라며 "엘니뇨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올 겨울철에도 이상기후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사설/칼럼 19면

공금 제멋대로 공직 도덕성 점검을

-국민권익위, 지자체·공공기관 부당사용 적발…각성 계기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서 시설부대비 공금을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의 안전화와 안전모 같은 안전용품과 여비, 체재비로 쓰여야 할 시설부대비가 상관의 값비싼 스포츠의류 등을 사는 데 쓰인 것은 물론 출장지역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수령해 적발했다고 최근(12월 5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집행 지적 여론에 따라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9곳,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교육청 3곳, 공직 유관단체 2곳 등 14개소를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집행 내역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처리기록 확인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고가의 스포츠의류와 신발 구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대상이 된 기관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적정한 집행이 만연돼 있음을 보인 것이어서 공직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을 우려하게 됩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적발 건수는 월등히 많아 1만여건에 달합니다. 해당직원 103명, 금액은 1억2587만원에 이릅니다. 도교육청은 6069건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소명자료를 냈고, 4755건 4802만원은 12월 중 자체감사를 실시해 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강원 2곳을 포함해 14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공금 부당수령 수법에 갖가지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가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고가 손목시계 등을 구입한 것은 물론 출장 내역서를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하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꾸며 수령한 출장여비만 3억원에 육박합니다.

사적인 물품을 구입한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의 피복비로 써야 할 공금이 안전용품이 아닌 상급자의 고가스포츠 의류와 신발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피복비를 부당 집행한 공금액은 무려 6억원대에 달합니다. 유럽 출장 경비로도 처리됐습니다. 14개소에 한정한 조사인데도 적발건수와 금액이 대규모이고 부당수법도 갖가지여서 놀랄 지경입니다. 장기간 경제가 어렵고 세수는 대폭 줄어 여러모로 고통이 큰 때입니다. 공금을 제멋대로 써서 시민 명예에 먹칠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사설/칼럼 19면

동계청소년올림픽 봉사자에 응원을

-2030명 대회 성공 다짐, 지원 아끼지 말아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청소년올림픽인 이 대회는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도내 4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주최 측과 관계기관은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개최 도시는, 강원도를 다시 한번 지구촌에 각인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봉사자들은 최근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대회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지구촌 손님맞이에 앞장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선서문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모두 힘을 모아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협동을 통한 성장의 가치를 알리겠다"며 "상호 존중의 올림픽 정신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사자들의 결의가 대회 성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발대식에서는 개최 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횡성의 시장·군수를 명예 자원봉사단장으로, 배우 이동욱과 방송인 박재민을 명예 자원봉사자로 각각 위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직위와 도는 면접 심사, 기본교육 및 외국어 테스트 등 과정을 거쳐 최근 자원봉사자 203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통역, 안내, 문화 행사, 수송, 숙박, 경기 운영 등의 분야에서 발로 뛰면서 대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이달 중순 업무 배정을 시작으로 직무 및 현장 교육을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현장 근무에 들어갑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사실상 올림픽 대회를 주도한다고 할 만큼, 이들의 활동은 중요합니다. 총 70여 개국 15~18세 선수 1900명을 포함한 전체 60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들의 헌신 없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봉사자들은 선수와 외국인 관람객들을 직접 대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의 임무도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응원하듯, 이들에 대한 뜨거운 격려가 필요합니다. 봉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사설/칼럼 25면

동해·삼척 수소산업, 민자 유치 차질 없어야

동해시와 삼척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3,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내 최대 액화수소산업 거점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이 지난 6일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김완섭 제2차관)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총 3,177억원(국비 439억원, 지방비 423억원, 민자 2,315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 전선을 형성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다. 동해시는 수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삼척시는 국내 최대·최고의 수소 공급 기지로 조성된다.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총 사업비 3,177억원 중 민간자본이 2,315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의 향후 성공 여부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수천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야 하는 민간자본 유치 방식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 민간자본 유치의 가장 큰 매력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고, 민간자본은 사업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자본 유치는 또 지역 주민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주민들이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각종 사업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이 투입돼 기반시설이 착착 건설되는 일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수익성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 시행이 대책 없이 늦어지면서 세월만 허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는 수소 클러스터의 본부 역할을 할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기술검증 기반 시설인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다양한 수소 형태별 기업 제품의 성능 평가, 기술 제품의 안정성 시험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또 수소 저장 운송용 탱크, 밸브, 배관 등 63개 기업이 입주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룬다.

총 사업비 3,177억원 중 민자 2,315억원
63개 기업 입주 계획, 수익성 잘 따져야 할 때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선순환 통로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기업 유치, 즉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한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려면 기업 유치가 순조롭게 돼야 한다. 더군다나 수익 창출을 전제하는 민간자본은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모든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보다 세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해시와 삼척시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차분하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 고용이 창출돼 주민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08일 (금)
사설/칼럼 25면

올해 도내 체불 임금 35% 증가, 엄중한 처벌을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임금 체불액이 올 들어 대폭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임금 체불액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3,414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합의 등이 이뤄지지 못해 재판까지 간 사례는 753건에 이른다. 임금 체불액으로 보면 올해 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임금 체불 사업장에는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도 있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규모가 심각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막힌다. 임금 체불이 곧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높아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노동자가 합의만 해주면 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도 남아 있다. 사업주들은 체불 임금 일부만 주고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부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 변제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임금 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심각한 범죄다. 근로자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임금을 떼먹고도 버젓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용납해선 안 된다. 임금 체불은 형법상 절도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중대 범죄다. 경제 위기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나 사업장이라도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됐다.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은 점검·단속 차원을 넘어 엄정한 사법 처리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